

2024년 정책 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광주에서 ‘잘’하자!

2024. 8. 14.(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2024년 정책 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광주에서 '잘'하자!

2024. 8. 14.(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Contents

1. 기획배경 및 세부일정	04
2. 주제발표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현황과 과제 박경석 상임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7
3. 토론	
· 서울지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례공유와 제언 박임당 교사(노들장애인야학)	41
· 광주지역 중증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추진 현황 공유 오윤옥 경영기획실장(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53
· 광주광역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추진계획과 고민 김상숙 장애인정책팀장(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과)	65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광주에서 ‘잘’ 하자! 정책토론회

□ 기획 배경

2024년, 서울 400명과 경기도 45명,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이하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 삭감으로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2020년, 서울에서 시작한 권리중심 일자리가 전남과 전북을 비롯 전국 각지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권리중심 일자리 대신 특화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권리중심 일자리를 시작한 광주 지역에서 고민할 쟁점을 던지고 있다.

- . 기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권리중심 일자리는 무엇이 다른가?
- .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주에서 논의되지 못한, 권리중심 일자리의 핵심을 명확히 하기 위한 쟁점을 확인할 시기!

- . 무엇을 ‘노동’으로 할 것인가?
- .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세부일정

좌 장 : 이명노(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구분	시간	내 용
개회	14:00~14:05	개회 및 축사
주제발표	14:05~14:30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현황과 과제 박경석 상임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	14:30~14:55	서울지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례공유와 제언 박임당 교사(노들장애인야학)
	14:55~15:20	광주지역 중증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추진 현황 공유 오윤옥 경영기획실장(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15:20~15:45	광주광역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추진계획과 고민 김상숙 장애인정책팀장(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과)
마무리	15:45~16:00	질의응답, 폐회 및 정리

주제 발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현황과 과제

박경석 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을 합니다

박 경 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중증장애인 노동권, 공공 일자리 쟁취하자고 그렇게 싸웠는데,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낸 기준은 또다시 재활의 기준, 비장애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 자본의 기준, 이윤, 생산성, 실적의 기준이었습니다. 노동력을 경쟁 능력의 상품이라 이야기하는 그 질서 내에 우리가 또 줄 서버렸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본부에서 85일을 싸웠던 그 결과가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놓은 이 일자리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동지들, 미안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또 우리가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에 줄 서버렸습니다.”

- 2019년 1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결의대회 박경석 발언 중.

2017년 11월 21일부터 이어진 전장연의 85일간의 장애인고용공단 농성 끝에 고용노동부가 마지못해 만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2019년 겨울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노동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동료지원가’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동료지원가는 월 네 명의 참여자를 발굴하고 한 명당 5회의 상담 및 취업 연계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적지 않은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 노동자는 사업 마감 기간이 다가왔음에도, 결국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실적을 다 채우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실적은 아무래도 기존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 결정적으로 이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자신이 받았던 급여도,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도 고스란히 뺏어내야만 했다. 당연하게도 그 피해는 동료지원가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동료, 그의 일터에까지 이어졌다. 그가 동료들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메시지는 “미안하다”였다고 전해진다.

며칠 후,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이미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박경석의 절규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우리는 이 일자리를 받고서 싸움을 멈췄으면 안 됐다. 공공 일자리에서마저 자본의 기준이 지배하는 이 세상, 거기에 굴복하는 순간 애초에 자본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는 또다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미안해해야 할 것은 어쩌면 그가 아니라, 자본의 기

준에 타협한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을 과거와 똑같이 줄 세우려 했던 이 세상 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죽음이 있고서 8개월 후, 마로니에공원에서는 꽤나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분홍 조끼를 입은 중증장애인들이 돌연 대거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한 동안 마이크를 제 몸 가까이 두려고 서로 크고 작은 분투를 벌인다. 몇 분 후 상황이 정리되자 뽕짝과 테크노가 조합된 멜로디가 울려 퍼졌고, 곧 이 멜로디는 무대에 오른 이들의 아우성과 마구 뒤섞이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음정과 박자가 엇나갔고, 고작 20분 남짓한 상연 와중에도 이런저런 사고가 어김없이 터졌지만, 이 공연은 원래 그렇게 계획된 듯 그저 자연스러웠다. 어느새 그들 앞에 둥그렇게 모여 박수를 치는 시민들 앞에서 이들은 있는 힘껏 장애인 권리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그리고는 자신있게 덧붙였다, “시민 여러분! 나도, 우리도,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동료지원가 사업 실패 후, 전장연의 요구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다. 이 일자리를 통해 어떤 노동자들은 지역사회 곳곳에 나타나 시민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어떤 노동자들은 그림을 그려가며 이 사회가 감춰온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어떤 노동자는 기자회견, 집회에서 할 발언을 준비하고 구호를 만들며, 피켓을 제작한다. 어떤 노동자는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며 장애인 접근권을 모니터링한다. 이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대중들에게 캠페인하고, 협약의 내용을 지역사회에 실현하는 노동을 한다. 이 노동자들은 금세 이렇게 자부하기 시작했다. “남들이 차를 만들고, 집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일자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 경남, 강원, 전남, 전북, 인천, 광주 서구, 춘천, 제천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 ‘신박한’ 노동의 나날은 금세 위협에 처했다. 2023년, 이 일자리에 대한 파상공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의 장애인 동원 일자리’라 폄하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오세훈 서울시는 24년 이 일자리를 단숨에 폐지해버렸다. 그리고 그 덕에 처음으로 일자리를 가져본 최종중증장애인 노동자 400여 명은 순식간에 해고노동자가 되었다.

이제 이들은 서울시 곳곳에 나타나 자신들의 복직을 걸고서 새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신들이 경험한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노동인지를 이 세상에 알려가며.^

고병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회 전체를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학교조차 갈 수 없다는 것, 사회 전체를 새로 배우게 하지 않고서는 야학에서의 작은 배움도 불가능하다는 것.”[고병권, 《묵묵》, 돌베개, 2018, 26쪽] 돌이켜보면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동권 투쟁에서 그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났지. 정말로 장애인들은 사소한 거 하나를 할래도 사회 전체를 이동을 시켜야 하고, 새로 배우게 해야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뒀으니까 우리 노들야학 학생들도 이제는 과거보다 더 많은 ‘일상’을 누리게 된 거잖아. 그런데요, 이것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이것들보다 더 강력하게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최종증장애인도 노동을 하겠다는 요구인지도 몰라요.

사실 “최종증 장애인도 노동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에서는 진짜 이상한 말처럼 보일 거야. 이 사람들 어떻게 봐도 도대체가 일을 할 수가 없어 보이거든. 장애인, 그러니까네 ‘disabled person’이라는 말 자체도 기원적으로는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이란 의미에서 왔잖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노동할 능력이 없으니까 죄다 그냥 시설에 가둬두기 시작한 거고.

나만 봐도요,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냐고 누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줘요. 이 사람들 노동할 수 없다고. 적어도 최종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렇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자본에다가 자기를 팔아가지고, 자본이 이윤을 뽑아먹을 수 있는 활동만 노동인 것처럼 이야기되잖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착취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으로 임금 주고 최대한 뽑아먹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려면 노동자한테는 당연히 거기에 맞게 생산성, 효율성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중증장애인들한테 이런 능력이란 게 정말로 있나?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없는 게 사실이잖아.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라도 돈 벌라고 맘먹으면 이런 사람들 안 뽑아요. 나같이 일 잘하는 장애인이라면 고민해보아야 하겠다(나도 제도상에서는 중증장애인인데, 비장애인들도 다 인정할 정도로 일을 잘하거든요, 하하). 그런데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은 정말로 지금 노동시장에서 존재 자체가 적합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네 자본 입장에서는 돈 벌어야 되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쓰는 게 맞지,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쓰는 게 맞겠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중증장애인들 고용하면 이 사람들이 일 잘 못하는 거 말고도 피곤한 게 참 많아지는 거거든. 중증장애인 고려해서 작업환경, 편의 시설 이런 거 다 바꿔야 하는 거만 봐도 그래. 이거 다 자본 입장에서는 돈이잖아. 이미 비장애인 중심으로 공간 다 만들어놨을 텐데. 이런 거 바

꾸는 데 제도상으로 국가 지원을 좀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중증장애인 고용하면 신경 써야 하는 게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부담이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참 괴심하긴 해도, 애네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괜히 그러는 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중증장애인들 집안일 시킬 거야? 당연히 안 되겠죠. 집안일이란 게 얼마나 힘이 드는 건데. 거기에는 또 거기에 맞는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 요새는 자본에 직접 고용이 안 되더라도 분명 이 세상 굴러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활동들을 노동으로 인정하라는 이야기들이 꽤 나오고 있긴 하죠. 특히 월급 안 받고 하는 재생산노동들 말이야.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에서 잘 인정 못 받던 필수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도 새롭게 이뤄지고 있고요. 이걸 참 좋은 일이지. 그렇게 노동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생산 시스템의 전환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런 노동 개념의 전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고려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언급하는 사람은 또 잘 없더라고. 재생산노동이나 이 사회가 필수노동이라 부르는 것들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 노동인지와는 별개로 비장애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노동이고, 그런 만큼 거기에 맞는 능력이라는 게 또 요구가 되잖아. 사실 이런 노동들은 기존 비장애중심주의 노동 시스템에서 이미 다 당연히 이뤄져온 노동이기도 한 거고. 노동 개념 전환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시스템 변혁까지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체제 내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노동 외에는 어떤 노동이 있을 수 있는지를 잘 떠올리질 못하고 있는 거야.

장애인 노동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은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장애인들도 노동 좀 시켜줍쇼” 하고서 구걸하기 전에, 지금의 노동 개념과 패러다임이 어떤지를 먼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지. 비장애인들보다 능력도 많이 떨어지면서 시혜적으로라도 일자리 가져서 나도 노동자다, 이제 나도 월급 받는다 이러면서 자부심 갖는 장애인들도 당연히 있긴 하죠. 그래도 중증장애인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도 거기서 일을 잘 못하니 자존감만 팍팍 떨어지고 그러니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거든. 결국 엉엉 울면서 그만두고 나오는 장애인도 있고. 경증장애인들도 이런데, 최중증장애인한테 그냥 아무 일이나 맡겨놓고 ‘야! 열심히 일해봐라’라고 하면은, 그게 장애인 본인한테 정말로 마냥 좋기만 하겠어요?

상황이 이러니깐네 지금 기준이 요구하는 능력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바로 ‘노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긴다고 문제가 곧장 해결이 될 리

없는 거예요. 장애인 노동권 문제의 대안이란 게 고작해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재미도, 성취감도 못 느끼는 일자리에다가 장애인들 억지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럼 일시키는 사람 입장에서야 당연히 안 좋을 테고, 사실은 같이 일하는 비장애인 노동자들도 장애인들 일 못하는 만큼 자기가 해야 하니까 아주 죽어나는 거거든.

분명하게 말을 할게요. 최종장애인이 노동을 하려면요, 정말로 노동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뒤집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제가 중증장애인이 노동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그러니까네 사실은 내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 이런 맘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노동 개념에 맞춰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노동으로 인정받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윤이나 생산성, 효율과 무관한 다른 다양한 활동들도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은, 그렇게 노동 개념과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면은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네 출발점은 언제나 지금 이 사회에서 일로 아예 인정을 못 받는 것들에 대한 상상을 더 확장하고, 그걸 이 사회에다가 정말로 실현해내는 게 되어야 하는 거야.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노동을 하려면은 사회 전체를 이동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한국 장애인운동이

장애인 노동권 투쟁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자본주의에서도 자주 하는 혁신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은요, 노동을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어요. 애네가 시대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해. 애네 입장에서도 그래야 계속 이윤을 뽑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비정규직 만들어내고 플랫폼노동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서부터, 인공지능 시대다 뭐다 하니까는 막 새로운 노동들이 탄생하고 그런 것들도 봐봐. 돈만 더 벌 수 있으면 노동이 아니었던 게 노동이 되고, 예전에는 상품도 아니었던 것들이 막 상품이 되고 그러잖아. 그런데요, 애네는 아무리 새로운 노동, 새로운 노동, 새로운 노동 말해봐야 결국은 자본주의 속성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경쟁, 효율, 생산성 같은 기준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네, 아무리 혁신이다 뭐다 해봐야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노동 세계가 바뀌어봤자, 중증장애인은 계속 그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혁신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비장애인 노동자들 삶은 도리어 더 힘들어지고.

문제는 기존 장애인 노동 정책이라는 것들도 여전히 이런 경쟁, 효율, 생산성

틀에 꼭 박혀가지고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그냥 자본주의적 노동의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지금도 그 안에서만 놓고 있어. 고용노동부도, 복지부도, 장애인고용공단도 기껏 한다는 게 그냥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맞게 이 사람들 조금 편입시켜보겠다 정도만 말을 하고 제도화해왔잖아. 자본주의 때문에 노동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데도, 이 관계의 전면적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고결 만들어온 거야.

윤석열 정권도 딱 그러고 있거든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생산성하고 무관한 노동, 우리가 싸워서 만들어낸 새로운 노동 개념 딱 걸고 있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같은 일자리는 주구장창 공격하고, AI시대 맞춰서 장애인 일자리 교육 확대하겠다 어쩐다 하면서, 어차피 중증장애인들한테는(사실은 상당수 경증장애인들한테도)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나 하고 있고.

솔직히 말을 해보자면, 과거 장애인운동하던 사람들도 기초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한국 장애인운동이 장애인 노동권 투쟁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80년대 후반에 장애인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시대 분위기에 맞춰진 게 있었던 거지. 그 시대는 계급해방, 노동해방, 이런 게 제일 중요했잖아. 그때부터 정태수[88년 장애인운동을 시작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운동 등 장애인 노동권 투쟁에 헌신하다 2002년 과로로 사망했다. 한국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기초를 닦은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같은 애가 마르크스 어찌고 쪼가리 글 읽고 와서 “장애인들도 일단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역사의 주체로서 계급투쟁에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박수받고 했던 게 괜히 그랬던 게 아니거든.

나도 고놈 때문에 참 힘들었어. 갑자기 나 다방 데려가 가지고 어디서 대학생 한 명 불러다가 《자본론》 같이 읽자고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내용은 하나도 이해를 못 하고, “그래 우리도 같이 자본주의 부숩가지고, 혁명하자” 이래 결의나 다지고서 술이나 먹으러 가고 그랬었지.

그런데 그렇게 자본주의 타도니 뭐니 엄청 거대한 생산 시스템의 변혁을 이야기했으면서도, 그때 요구들 잘 생각해보면 기껏해야 그냥 기존 시장 내에서 이미 노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들 나도 하게 해달라,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다, 이 정도였던 거거든. 그러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이었는데, 이 법만 들여다봐도 그래요. 이 법의 핵심이 고용할당제거든. 흔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로 불리는 거지. 고용의무제란 건 쉽게 말해서, 노동자 몇 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서는 몇 프로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라 이런 거야[90년대 초에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전체 노동자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었고, 2024년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3.1퍼센트, 공공에서

는 3.8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 기준 안 지키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거고.

이 법 제정하는 투쟁 과정도 장애인의 노동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운동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 고용의무제가 장애인 노동권 보장 관련해서 갖는 의미도 물론 크죠. 특히 그래도 노동능력이 좀 있는데 차별받아서 일자리 못 갖는 경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아주 소중한 수밖에 없는 거거든. 지금까지도 이 제도가 장애인 고용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80년대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투쟁하고 90년대 내내 고거 지키라고 요구했던 사람들도요, 중증장애인들이 특히나 노동에서 배제되는 문제 같은 거는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이미 누구를 배제한 채로, 아니 사실은 아예 생각도 못한 채로 이런 요구만 주구장창 한 거야. 하긴 그때는 진짜로 중증장애인이라고 볼 만한 사람들, 진짜 이 사람은 노동이라곤 못 하겠구나 싶은 사람들이 정말로 사회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들은 다 집구석이란 시설에 갇혀 있었지. 장애인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휠체어 타고 다닌다고 제일 중증인 것처럼 보고 그랬던 시기인데. 운동 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소아마비 장애인들, 목발 짚고 다니는 장애인이 대부분이었던 거고, 장애인운동을 이끌던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었죠. 거기다가 사실 졸업하고서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할 것 같은 운동권 물 먹은 대학생들이 주도했던 운동이기도 했고 (우씨.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람들 대부분 돈 지원 잘 받는 보수 관변 장애인 단체에서 짱 먹고 있어).

그러니까네 그때 요구는 결국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장애인들은 좀 일할 수 있게 일자리의 파이를 만들어주세요 정도였던 거야. 우리도 일 잘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거는 장애인을 노동 못 하게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다가 건드렸던 건 아니잖아.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생산성 자체가, 능력주의나 비장애중심주의 자체가 문제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나도 그래도 능력 있어요, 이런 데서 머문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초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안 치고 나가니까 결국 90년에 법이 만들어진 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고. 당장 기업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게 제일 크지. 애네들 명목도 들어보면 그럴싸하거든. 장애인들 저렇게 아무리 우겨봐야 실제로 보면은 생산성도 대체적으로 낮고, 그러니 맡길 일이 없다는 거야. 사실 장애인 고용에 아예 관심도 없고 능력 있는 장애인도 뽑을 생각 없으면서 맨날 저 핑계만 대는 거지, 하하. 이 법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과거나 지금이나 수많은

자본들이 그냥 대강 고용부담금 내고 때우고 있기도 하고. 장애인 고용하느니 차라리 부담금 내고 마는 게 나으니까. 한국에서는 고용부담금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부담이 적기도 하거든.

그러니까네 경증장애인들 입장에서든 아무리 이렇게 고용의무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곧바로 취직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도 취업해서 먹고살려면 자기 능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계속 증명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경증장애인이라고 해봐야, 이 사람들도 비장애인들보다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 많고, 일도 지지리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럴 거잖아. 그럼 이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자기 능력을 키워야지, 뭘 어떻게 해. 자기는 못난 장애인이니까는 비장애인들하고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야. 이렇게 장애인 위한다는 제도를 만들어놔도 계속 그 안에서 능력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씨, 80년대에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거 얻어내려고 엄청 목을 매고 싸웠는데, 고작 이런 발상 가지고서 무슨 자본주의 타도를 하겠어.

저는 물론 그때 이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꼭 엄청나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사실 그 시대에 이 정도 이야기만 한다고 해도 정말 괜찮은 거였지, 뭐. 그때 훨씬 더 후진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 용역 깡패, 앵벌이, 시혜와 동정 활용해먹어 가지고, 이런 걸로 누구는 사업해먹고, 장애인들도 생계 보장 수단으로 삼고 그런 시기였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에서도 장애인 노동 하면 이 정도 발상 넘어선 데는 (지금까지도) 거의 없기도 하고,

어떤 운동이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전복적인 이야기를 딱 내놓을 수 있지는 않아요. 운동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새로운 논리를 말할 수 있는 토양이란 게 만들어지고, 그러니 지금같이 정말 획기적인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만큼 그때 투쟁들이 지금 장애인 노동권 투쟁의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 거죠.

@1만 명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는데,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인 거야@

어쨌건 간에 장애인 노동 정책이 애초에 이렇게 자본주의적 능력주의에 바탕을 두고 출발을 했다 보니까, 장애인 노동 하면은 이때부터는 죄다 직업재활 이념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봐야겠죠. 직업재활을 뭐 아름답게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도모하고, 지원하고 이리저리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

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 까놓고 말하면 핵심은 “너 생산성이 비장애인 기준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노동하려면 장애를 극복해라!” 이런 거거든.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손상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깔아놓고서, 결국 장애인이 비장애인들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네 그런 만큼 비장애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매우 노력해야 하는 거지. 그럼 정말로 경쟁력을 갖춘 노동력이 될 것처럼.

이런 걸 두고 바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자기 존재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문제가 다 쉽게 해결되게? 이 사람들 그냥 “나도 노동할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결국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 존재를 극복하고 바꾼다는 건 비장애인들도 힘들어하는 거잖아. 가끔 똑똑하고, 엄청 잘나가지고 성공한 장애인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이런 기조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업재활 정책 30년이 얼마나 실패한 건지는 통계로도 딱 드러나거든요. 지금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같은 거 보면은 아직도 엄청나게 낮아요. 장애인의 62퍼센트 정도가 비경제활동인구예요. 전체 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35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

중증장애인들은 더 하거든.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은 22.9퍼센트밖에 안 되고, 유형별로도 보면은 뇌병변장애인, 안면장애인들은 14.2퍼센트, 발달장애인은 33.3퍼센트 수준밖에 안 돼요. 성별 격차도 무시할 수 없죠. 장애여성들 경제활동 비중을 보면은 또 장애남성들보다 엄청나게 낮거든. 장애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8.3퍼센트인데, 장애여성은 24.3퍼센트니까[2022년 기준].

비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들 중 상당수는 주부도 있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대학생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네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임금노동을 해가면서 계속 먹고살아 갈 희망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데 장애인들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처럼 어디 최소한의 노동의 희망이라도 보이기를 하나?

이렇게 직업재활 정책이 재활 자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를 못하니까, 언젠가부터는 직업재활이 아예 장애인들 일반 노동시장에 들여보내겠다는 애초의 목적까지 잃어버리고서, 장애인들 ‘보호’하는 복지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기까지 하더라고. 이게 2000년대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이름 바뀌면서 아주 본격화되어 버렸지.

아마 비장애인들한테는 낫설 텐데, ‘보호작업장’이란 데가 아주 대표적인 곳이에요. 한국에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생산성 떨어지는 장애인들한테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최저임금 못 받고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 절대다수가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평균적으로 37만 원 정도 월급으로 받는데, 그거 받고서 그냥 거기서 보호받고 있는 거야. 아이고, 평균 월급이 37만 원이라는 거지, 10만 원, 5만 원 받고 이러한 장애인들도 많아.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 거 같아요? 매년 통계 보면 9000명~1만 명을 왔다 갔다 해. 9000명~1만 명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문제도 안 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지금 이 한국 사회인 거야.

물론 당연히 보호작업장에서도 직업재활을 명목으로 걸고 있긴 하죠. 경쟁 노동시장에 못 들어가는 장애인들을 보호해서 고용한다는 개념으로, 여기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비장애인들도 일하는 일반 노동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거니깐. 그런데요, 이게 말이야 좋지, 이렇게 경쟁 노동시장으로의 이전이 최종 목적이면은 지금 당장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을 받기가 쉽겠어요? 애초에 이 사람들은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 보장된다 어쩐다고 할 때도 있는데, 사실 보면은 그냥 훈련생처럼만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어차피 여기는 제대로 된 공장이 아니고, 제대로 된 공장으로 가는 중간 단계일 뿐이니까.

그러니까네 이 노동자들한테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그게 쉽게 정당화가 되어 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 권리를 앞장서서 보장해줘야 하는 <최저임금법>이란 법이 도리어 장애인들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더 부추기고나 있고. 이것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비장애인 중심의 능력주의 사회인지가 딱 드러나지 않나?

@그냥 특정 시간 동안 장애인 보호하는 시설인 거지@

상황이 이런데도 어떤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들 거기에 보내놓는 게 좋고, 어떤 장애인 당사자들은 본인도 거기에 있는 게 좋은 거야. 거기서 오래 일했던 어떤 장애인들은 거기서 일하는 거 정말로 치욕스러웠다고 이야기들도 하지만, 또 많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있게 해줘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들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 전장연이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라”라고 하고, “보호작업장 단계적으로 없애나가자”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 해고되지 않나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사라지지 않나, 우리는 거기에라도 줄 서 있을 거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도리어 반발을 하지. 고놈의 외부 세력 이야기 또 꺼내면서.

사실은 발달장애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장애인 활동지원도 제대로 못 받지, 공적으로 지원받을 것들도 없지, 그러니까네 거기에 발달장애인 자식 보내놓으면 자기가 장애인 돌볼 부담도 떨어지는 거야. 보호작업장도 가족 대신 그 시간 동안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선전을 해대고. 언론에서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 못하는 장애인들 보살펴준다, 심지어 일도 시켜준다 하니까는 막 미화해주고. 진짜로 딱 장애인 거주시설들 미화하는 논리랑 똑같은 논리가 사용되는 거죠. 하긴 뭐, 염전, 농업, 축산업 이런 데서 노예노동이나 하는 장애인들보다야 여기가 훨씬 양반이니까.

그럼 여기서 열심히 일 배워가지고 경쟁 노동시장으로 빨리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리 훈련해도 생산성이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작할 때부터 벌써 재활에 실패한 거지, 뭐.

내가 열심히 보호작업장 나가면서 옆에 있는 장애인들보다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쳐. 그럼 뭐 해. 그렇게 되면 민간 노동시장에 취직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봐야 안 돼요. 보호작업장 안에서나 기술 좋다 하지, 경쟁 노동시장 나가면 그 사람 기술은 평균 축에도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네 여기서 아무리 일 잘해봤자 그냥 거기 남아 있으면서 특히나 일 못하는 다른 장애인들이 할당량 못 채운 만큼 자기만 일 더 하고 사는 거죠. 일 더 못하는 사람들이 못 만든 만큼 자기가 더 만들면서,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 계속 재활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작업장입니까? 노동 명목 걸고 있다지만, 그냥 특정 시간 동안 장애인 보호하는 시설인 거지.

사실 보호작업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이미 국제사회도 다 알고 있어요. UN에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해냈죠.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 분리노동과 시설화를 부추긴다부터 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노동 기회를 열어주는커녕 도리어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차별을 강화한다고도 하고. 2014년에는 UN에서 아예 대놓고 한국 정부에다가도 보호작업장 단계적으로 축소해가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지. 그런데 지금 보면 도리어 보호작업장이 늘어버렸어, 우씨.

워낙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난 잘 모르는데, 보호작업장 는 거 보면 이게 돈이 되긴 하나 봐. 맨날 자기들 돈 없어서 장애인들 최저임금도 못 주지만은 어쨌거나 장애인들 보호하는 좋은 일 한다고 홍보해대는데, 이걸 어떻게 믿나?

@이 사람들 존재에 잘 맞는 노동이란 건 도대체 뭘까@

장애인이 보호작업장 같은 데보다야 그래도 월 나온 일자리 힘들게 가져왔어요, 죄다 비정규직 계약직이지, 엄청난 저임금 일자리지, 그런 상태예요. 공공

에서 만든 복지 일자리들이라고 해도 죄다 엄청 불안정하기도 하고. 1, 2년 하
면은 더 이상 거기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장애인 당사자들도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서 ‘일만 시켜줘도 감지덕지다’ 이려고 있어요. 이게 상상력
이 차단돼버린 거거든. 자기는 사실 비장애중심주의적인 체제 덕에 그렇게 차
별받고 살고 있는 건데, 그 체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고 있는 거지.
진짜 무서운 건요, 이렇게 차별에 스스로 굴종하게 만드는 사회예요. 스스로
존엄성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동권 투쟁이랑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투쟁 뺀 세계 했으니까, 이제는 노동 문제에서도 좀 돌
파구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2017년 11월에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딱
점거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탈시설 투쟁도 열심히 해가지고 당시 문재인 정권
이 소극적으로나마 거기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으니까네, 이제 탈시설 장애
인들이 지역사회 나와서 시민으로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먹고살 수 있는 길
을 찾아야 할 거 아냐. 그러니 노동권 보장이라는 게 엄청 절실해진 거지. 그
래서 거기를 딱 기습 점거를 해버리고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고 외치면서
85일을 빼앗쥘.

그때 우리 핵심 요구는 이거였어.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공공 일자리 81만 개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중에 1만 개는 장애인들에게 보장해라, 라고 이야
기를 하고, 최저임금 못 받는 장애인이 1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 사람들 최
저임금 보장되는 일자리를 공공 차원에서 만들어라, 그리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하라고 한 거지.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또 우리 쪽에서 드디어
이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구호가 또 하나 딱 등장을 한 거야. “중증장애
인도 노동을 하겠다! 우리도 노동자다!”

그런데 이 투쟁을 하다 보니까는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을 하려면은 정말로 새
로운 노동이란 게 필요하겠구나 싶더라고요. 한 번도 일을 못 해본 발달장애
인이 “나도 휴가 가고 싶다!”라고 외쳐대질 않나, 아무리 봐도 일 못 할 것 같은
뇌병변장애인이 휠체어에 딱 누워서 AAC[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흔히 언어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로다가 “나는 이미 노동자다!”라고 외쳐
대질 않나. 발언한다고 앞으로 나가더니 뜬금없이 음정, 박자 따윈 썩 다 무시
한 채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농성장에서 내내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장
애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매 순간순간 임금노동의 상식을 깨는 말들
을 하고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사실 난 그 광경이 너무 즐겁더라고. 우리 존재 자체가 임금노동에 대해서 이렇게나 굉장히 반역적이라는 걸 잘 보여준 거잖아. 하하. 그런데 그만큼 고민도 깊어지기도 했어. 노동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광경이 계속 펼쳐져봐, 고민을 안 할 수가 있나. 스스로 계속 되문게 되더라고.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진짜 일을 할 수가 있긴 한 걸까?

발달장애인들이 요새는 표준사업장[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으로, 여기에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데서 바리스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커피 만드는 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고용공단 같이 접거했던 최종중증장애인들은 그런 일자리 만들어놔도 아무리 봐도 못할 거 같은 거야. 그럼 정말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이 사람들 존재에 잘 맞는 노동이란 건 도대체 뭘까, 동지들이랑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농성하다 보니까는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TF 만들어서 협상을 하게 되어서, 고용노동부에도다가도 새로운 일자리 개념으로다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자리로 공공일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TF에 우리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막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교수들이나 관변 장애인 단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도 했거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장을 이해할 수 있거나 했겠어? 그렇게 TF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고용노동부가 끝내 들고 나온 안이란 게 또 엄청 이상하더라고.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란 이름으로 '동료지원가' 사업을 만들어놨는데, 이 일자리는 실적 중심에다가 중증장애인들한테 적합한 노동으로 보이지도 않는 일을 시키는 거야. 심지어 비장애인도 하기 힘들 거 같아 보이는.

그래도 농성도 길어졌으니까 별수 없이 고용노동부한테 이거 받고서 잠깐 싸움을 끝냈는데, 이야! 고용노동부가 만들어온 이 일자리 진행해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뻑세데. 장애인 당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취업 연계해주는 노동을 하라고 만든 일자리인데, 동료지원가 장애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엄청나게 많고, 만나서 상담해야 하는 사람 수도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리고 일 처음 해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 일 시켜다 두고는 또 자기들이 정해둔 실적을 못 채우면 그동안 받은 돈을 뺏어내래요. 아니, 일단 장애인이 갈 직장 자체가 이 사회에 얼마 없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취업 연계 노동 하는 사람 실적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렇잖아도 일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들한테. 결국 이 일자리 하다가 ○○○이라는 분이 자살까지 하고 그랬어.

○○○이라는 동료지원가 노동자가 죽고 나서 추모제를 하는데, 물론 마지못해서 그런 거긴 했지만 이 안을 받은 게 잘못된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추모제에서 발언을 하는데, 그런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에 줄을 서 버렸습니다.”

경쟁, 효율, 실적, 능력…… 이게 최종증장애인에게는 정말로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진짜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 생산성 중심 사회에 더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 이 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정말로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무라는 거를 국가가 안 만들어 오면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한번 더 다짐을 하게 됐죠.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사회적 변화라는 거를,

자기 권리라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왔잖아@

그런데 과거를 잘 돌이켜보니까, 최종증장애인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해온 건 또 아니더라고요.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사회와 맞서 싸워오면서, 사회적 변화라는 거를, 자기 권리라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왔잖아. 이동권 투쟁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중증장애인들이 싸워가지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저상버스를 만들었잖아. 이거 장애인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거지만,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거든. 이건 정말로 전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동의 ‘권리를 생산’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게끔 사회의 어떤 물리적 조건들을 계속 변화시켜온 거기도 하고.

이런 변화는 이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그냥 두면은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애초에 이윤 뽑아내는 데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들을 고려하고서 사회의 장소들이 만들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국가랑 사회가 제대로 못 해왔으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해온 거야.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불리던 중증장애인들은 분명히 사회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생산해온 거지. 그럼 이 활동은 노동이 아닌 건가? 세상을 새롭게, 더 낮게 바꿔낸 건데도?

이런 질문 받으면 당연히 어떤 분들은 아리까리할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노동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한 거거든.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노동이 아닌 거를 노동이라고 우기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우리 생각이 맞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못 하게 하는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지동설을 한번 생각해봐요. 천동설이 상식으로 통할 때도 지동설을 논리로 만들 수야 있었지. 그 논리가 당시에는 이단이었으니까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그거 때문에 종교재판받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재판받고 나와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구가 돈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이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 당장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를 느끼지를 못하잖아. 그게 논리로 나오건, 증명이 되어 있건 말건, 그럼 뭐해. 어차피 우리가 딱 지구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저는 장애인들이 권리를 만들어온 활동들을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이거랑 똑같다고 봐요. 김도현이나 정창조 같은 애들이 논리까지 만들어서 “중증 장애인도 노동을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바꿔온 거를 쪽쪽 보여줘도 지금은 그걸 노동으로 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미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하는 건 아무리 봐도 자기 상식에는 노동이 아닌 거지. 이미 사람들에게 우겨져 있는 삶의 방식이랑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 말에 동의하건 그러지 않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좀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게 있거든요. 노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결국에는 우리 삶에서 가치가 있고 유용한 것들, 사람들이 더 존엄하게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생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이누이트는 이누이트 공동체 나름의 노동이란 게 있고, 열대 지방 선주민들한테는 또 그 사람들 나름의 노동이 있고 한 거거든. 환경이 다르면은 필요한 노동 개념도 달라지니까 시대마다, 지역마다 노동이 다 달라지죠. 지금 시대에서는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상품으로 팔릴 수 있는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하지. 그런데 그런 것들만이 정말로 생산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자본이 주도하는 생산에서는 정작 사회에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보다 돈을 버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또 세계를 파괴하는 것들도 많잖아.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곧장 세상에 유용한 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 금융 투기 자본에서 노동하는 거는 어때요? 대자본들 합법적으로 탈세하게끔 법적 논리 만들어주는 변호사들 노동도 그렇고. 기후위기 막 심화시키는 노동들도 있고 그렇잖아.

이런 노동들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이라든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건데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활동 없이 이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노동들은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능력 없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나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든가 하는 것도 이런 고민들 속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이 일자리가 서울시에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일자리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대중들한테 캠페인하는 노동을 하죠.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사항들 지적하고, 이거 실질화하는 노동을 하기도 하고. 권익옹호활동을 하거나, 문화 예술 활동을 하거나, 장애인식 개선 강의 같은 거를 해가지고,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또 마침 2014년에 한국 정부한테 “정부나 지자체, 정치인, 언론, 시민들한테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교육하라”고 권고를 해냈거든. 한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한 나라고, 헌법에 따라서 이 국제협약을 잘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당연히 협약 비준 당사국이니깐 애네가 내놓은 권고도 이행할 의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거 잘했을 거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안 하니깐, UN이 권고한 이 의무를 이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노동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만들어낸 거죠.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캠페인이란 거는 이 사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꼭 능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사회에서 도무지 할 노동이란 게 보이지 않는 발달장애인들이나 뇌병변장애인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노동도 안 해봐서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시민들 지나다니는 데서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불러. 맘대로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고, 악기 두들기고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일단 신기할 거거든요. 시민들이 이런 중증장애인들을 어디서 보거나 했겠어?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공연하고 그러면은 일단 그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야. 당연히 권

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서울시 교향악단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당연히 비교도 안 되게 못하죠. 그런데 그게 또 보고 있으면 나름 재미가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신기하게 보고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UN장애인권리협약>이 뭔지 알려주고. 그렇게 장애인도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죠.

어떤 장애인들은 지하철역 앞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내용 담긴 피켓 들고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 팸플릿 나눠 주고. 어떤 장애인들은 기자회견 같은 거도 꾸리고, 어떤 장애인들은 집회도 나가서 자기 목소리 내고. 어떤 노동자들은 지역 다니면서 장애인 접근권 잘 돼 있나 모니터링도 해보고, 장애인 접근권 잘 되게 보장해달라고 지역 식당이나 건물들, 관공서들 이런 데다가 권유도 해보고. 또 이 일자리 하는 각 단위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런 일 해보면 좋겠다, 저런 일 해보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세부적으로다가 어떤 일을 할지 정하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요, 능력, 실적 같은 거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캠페인에서 말 잘 못한다고 이 사람들 자를 거야? 노래 못한다고, 춤 못 춘다고 다 자를 거야? 좀 비장애인들이 못 알아듣게 발언했다고 자를 거야? 이걸 애초에 그런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홍보의 기술로만 생각하면 비장애인, 경증장애인이 더 쉬울 수 있는 거거든. 삼성에서 컴퓨터를 만든다면 경쟁을 통해 더 잘하는 사람을 뽑겠지. 하지만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는 더 중증인 사람, 더 일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요.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캠페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사실은요, 통상적으로 노동자를 뽑는 기준과 정반대의 기준으로 노동자를 뽑는 과정도 생산물일 수 있고 이들의 노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권리를 알리기 위해 나누는 대화, 맺는 관계도 권리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생산물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없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나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권리를 계속 노래하고 다니면서, 권리라는 게 생산되고 공적인 사회적인 가치가 생산되고 있는 거죠.

@저는 노동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일자리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 모두가 이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거 하고 싶다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렇지. 사무직 못 할 거 같은

데, 사무직 가고 싶다고 하는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일자리 참여하면서 그 사람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엄청 많거든. 이걸 통해서 생긴 자기 삶의 변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애인들도 많고.

일단 당연히 돈 한 번도 제대로 못 벌어봤는데, 직접 일을 해서 월급을 버니까 그게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 이 사람들은 보호작업장 출신도 좀 있지만, 보호작업장도 못 갈 정도로 중증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보호작업장서 일해봤던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서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했는데, 이 일자리는 최저임금도 다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의 감각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지. 방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시설에 갇혀 있던 사람들한테는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경험들 자체가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세상이 다 쓸모없다고 취급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도 소중한 거고. 또 이 일 하려면은 혼자 일하기 힘들니까 근로지원인이 붙어서 같이 일하고, 다른 동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거거든. 그럼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방법도 이 일을 하면서 점차 배워가는 거죠. 당연히 장애인 권리 홍보하면서 만나게 되는 시민들하고도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워가기도 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여기서 2년간 노동을 해온 최종중 장애인 조상지라는 노동자는 2020년에 국정감사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 일자리에서 한 일은 저상버스 알리기가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고 경사판이 있어서 휠체어, 유아차, 임산부, 어르신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 시민들에게 전단지도 나눠 주고 피케팅도 하면서 저상버스에 대해 알리고 보급률도 높이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에게 일자리의 의미는 의식주를 위해 돈을 버는 활동 그 이상입니다. (...) 저는 중증장애로 인해 집과 시설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직장이 생기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출근과 퇴근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일자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생활을 하게 해주면서 제 삶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나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회의]+

조상지 같은 최종장애인을 아마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진짜 불쌍하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껏해야 저런 사람도 사람인데, 복지 잘 줘가지고 살게는 해줘야지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이 노동자가 이런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저런 말을 하는 거 보고도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정말 그냥 불쌍하다고만 볼까? 절대 안 그럴 거거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세상이 이동을 한 거지.

저는 노동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건 결국 자기를 둘러싼 관계를 계속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확인이란 건 곧 이 사회가 중증장애인이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죠. 그 사람의 존재부터 해가지고, 이 사회의 조건에 대해서까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야.

@일석이조도 아니고, 일석백조쯤 될 거야@

좀 사랑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일자리는 정말로 전 세계 전체를 뒤져봐도 찾기가 힘들어요. 한국에서 나랑 전장연 활동가들이랑 함께 엄청 열심히 고민하고, 여기저기 돌아보고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일자리이고, 또 '권리생산노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노동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참 크지만, 이런 노동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 개념이나 생산성 기준이란 것들이 뒤집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기후위기도 심해지고, 불평등도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노동 세계 전반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이런 권리생산노동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실제로 이 노동 세계와 이 노동 세계가 떠받치고 있는 사회는 엄청나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 일자리를 잘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 시대에 통용되는 생산성이란 게 정당한가를 질문하는 과정이고, 가치라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질문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기존에 장애인들을 노동 바깥으로 내쫓아온 이윤 중심, 능력 중심으로 이야기되던 생산성, 가치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말이에요. 기존 체제에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일들이 노동으로 인정받게 만든다는 거는, 기존 사회에서 제일 쓸모없다고 불리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

계끔 만든다는 거는 그런 만큼 정말로 엄청난 변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돌봄’이라는 표현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기만 하는 대상으로 치부해버리고, 계속 시혜의 대상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요새는 ‘돌봄’이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곳곳에서 이야기되고 있잖아. 탈성장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돌봄’ 중심의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노동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도 엄청 많이 했는데, 별로 주목을 못 받았지). ‘돌봄’이라는 표현이 싫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거는, 이런 노동에서는 또 자본주의적 생산성의 잣대를 적용하기가 엄청 애매한 게 있거든. 물론 이런 노동에도 어떤 능력은 필요하지. 그런데 그런 노동에서 일 잘한다는 게, 한 명이 장애인 서너 명 동시에 돌봤다더라, 이런 게 아니거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 목소리를 경청해서 잘 이해하고, 또 그 사람 의지 같은 거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거는 돈 단위로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아닌 거야.

그런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같은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증장애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고 해봐요. 그럼 그 장애인 혼자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온갖 지원노동들[박경석은 사회에서 ‘돌봄노동’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자주 ‘지원노동’이라고 부른다]이 붙어야 하는 거거든. 근로지원인 같은 노동자도 있어야 하는 거니까. 이 노동자들 일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지원하는 장애인들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까를 계속 배워가는 거거든요.

뭐 맨날 일자리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같이 의미 있는 일자리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또 공적으로 많이 만들어봐. 이걸 장애인들한테도 좋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사회적, 공공적 가치 생산도 훨씬 잘 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자본주의적인 가치나 생산성 개념, 노동 개념 같은 걸 뒤집어서 생각해볼 기회도 생기고. 일석이조도 아니고, 일석백조쯤 될 거야. 맨날 자본 중심으로 ‘혁신, 혁신’거리는데, 자본이 이렇게 혁신하는 것보다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혁신이 사실은 이 세상에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는 소중한 일자리(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하)가 지금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있어요. 몇 년간 쪽 잘해왔는데 하태경이랑 서울시가 갑자기 전장연이 중증장애인들 집회에 동원하는 거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활용한다고 우겨대면서 이제는 이런 일자리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국민의힘은 집회할 때 그렇게 사람들 동원하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 집회에서 권리생산노동해가지고 나오는 사회적 변화라는 생산물들의 의미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사람들 여전히 일 못하고 자발성은 전혀 없는 사람들로만 보니까 이런 발상이 가능한 거겠지.

도대체가 말이야, <UN장애인권리협약> 내용 캠페인하고, 이 협약 내용 실질화하는 데 집회를 활용하면 왜 안 되는 건가요? 한국에서 집회 및 시위라는 게 법적으로다가 금지가 되어 있나? 이 일자리가 애초에 캠페인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캠페인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일자리가 갖는 지향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권리생산', '권리 캠페인'이라는 내용을 빼면은 빵 공장에서 빵 만들던 노동자들한테 빵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최종중증장애인들이 다른 노동에는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 노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건가? 뭐 이 사람들보다 더 경증인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맡기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데 서울시는 정말로 이 일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고서 그런 경증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놔 버렸어. 이 일자리에서 일하던 중증장애인 400명은 그러니까네 졸지에 짚려버린 거지.

정말 이거는요, 우리를 탄압하는 것도 문제지만, 역사에 역행하는 거라고 봐요. 절실하게 노동 개념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이걸 여러 방식으로 확장은 못할망정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정말이지, 해고를 당해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오세훈 시장이에요.

굉장히 큰 좌절이 찾아온 시기지만은 그래도 옆드려 울고 있을 수만은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일자리 서울에서 다시 살려내고, 전국적으로다가 더 확장될 때까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같은 노동이 보편화되면

그때는 도리어 자본가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몰라@

사람은 다 나이가 들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라는 거를 언젠가는 모두가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젊었을 때 노동력 신나게 써먹다가 나중에 쓸모없어지면 칼로 잘라내듯 잘라버리는 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 그렇다고 그렇게 능력이 없어진 사람들을 지금처럼 계속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내버려둘 거야?

뭐 언제까지 따뜻하게 감싸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자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도 돈 남으면 대강은 좀 돌봐줄까 이럴 건데요. 그래서 안 되겠죠. 자본주의적인 노동 생산성 기준으로 무능력하다고 버려지는 사람

들, 약해지는 사람들, 늙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노동의 관계를 새로 맺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평등하게 관계 맺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국가가 잘 지원을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거야.

연금 같은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냥 놀면서 살겠다 하면 그러라고 두면 되겠죠. 그런데 그래봐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쨌거나 노동으로 계속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는 게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이걸 노동 영역이 아니라 단순히 복지 영역으로 돌려버리면, 그거는 곧 이 사람들을 그냥 굉장히 수동적인 서비스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네 지금은 이런 문제를 단순히 시혜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 문제로 푸는 거가 정말 필요한 시기인 거지.

물론 지금도 공공 일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긴 하지. 많이 불안정한 일자리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일자리를 넘어서 공공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존 공공 일자리들 보시면 직무들 자체가 굉장히 명목상으로, 시혜적으로 만들어놓은 경우가 많거든.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우선 적용 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같은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공적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자리, 권리를 생산하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봐. 물론 임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고. 그러면은 모두가 나이 들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취급 안 당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요? 네. 많이 들겠죠. 그런데 돈이란 게 왜 있는 건가? 사람들 잘 살라고 있는 게 돈 아냐? 그냥 돈 불러대려고만 돈을 사용하려 하고, 그래서 세상을 망치건 말건 거기에만 돈을 투자하려 하는 지금 체제가 진짜 이상한 거지.

저는요, 세상 망쳐대는 재벌에게 돈 몰아주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훨씬 더 잘 생산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같은 노동이 보편화가 되면은 진짜로 그때는 도리어 자본가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몰라, 하하. 자본이 지금까지 이윤을 최대한 많이 벌어들여려고, 그러니까네 생산성, 효율성 기준에 맞게 노동 세계를 만들어왔고 그 기준에 맞춰서 노동자들 착취해가며 돈 열심히 긁어모아 왔는데, 그런 노동들보다 소중한 노동들이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게 돼봐. 사람들이 아! 자본에 복무해서 일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노동이 있구나! 그렇지,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노동이 더 중요한 거지, 생각하게 되어버리고.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변혁이 될 수 있지 않겠어? 체제가 전복되어서 사회적 관계라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바뀌면 체제 변화가 찾아오는 거지.

체제 변혁이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커다란 해방 이야기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데서 하나씩 관계를 바꿔나갈 때, 어떤 발아 지점이란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씨앗이 되어서 혁명이란 것도 찾아올 수 있을 거죠. 씨앗만 잘 자리를 잡으면은 그 이후에야 뭐, 한꺼번에 확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네 타고 오듯이 천천히 우아하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첨부자료1> 지역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연도지원 내용

<서울>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260명 시간제(주20시간) 130명 복지형(주14시간) 130명	275명 시간제 158명 복지형 117명	350명 시간제 158명 복지형 192명	400명 시간제 200명 복지형 200명	폐지
전담인력 지원	미지원	15명 기관당 1명	15명 기관당 1명	25명 기관당 1명	
보조사업자수 (*위탁기관수)	11개소	15개소	15개소	25개소	
사업기간	6개월	9개월	12개월	12개월	
예산 (시비전액)	1,191,000천원	2,552,940천원	4,557,264천원	5,802,864천원	

<경기>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미시행	25명	200명 시간제(주20시간) 100명 복지형(주15시간) 100명	500명 시간제 250명 복지형 250명	665명 시간제 133명 복지형 532명
전담인력 지원		미지원	10명 기관당 1명	50명 참여자 10명당 1명	66명 참여자 10명당 1명
보조사업자수 (* 위탁기관수)		5개소	10개소	25개소	34개소
사업기간		9개월	10개월	10개월	11개월
예산 (도비전액)		250,000천원	2,200,000천원	6,251,726천원	9,139,029천원

<전남>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미시행		82명 복지형(주15시간)	93명 복지형	120명 복지형
전담인력 지원			15명 참여자 5명당 1명	15명 참여자 5명당 1명	24명 참여자 5명당 1명
보조사업자수 (* 위탁기관수)			13개소	14개소	16개소
사업기간			7개월(3월~9월)	12개월	12개월 *일부 지역 3년 위탁
예산 (광역3 : 기초7)			685,000천원	1,493,000천원	2,089,000천원

<전북>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미시행		10명 주14시간형	76명 주14시간형	134명 주14시간형
전담인력 지원			미지원	미지원	10명 기관당 1명
보조사업자수 (* 위탁기관수)			1개소	8개소	11개소
사업기간			9개월	12개월	12개월 *일부 지역 3년 위탁
예산 (광역2 : 기초8)			33,330천원	514,700천원	1,246,595천원

<경남>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미시행		10명 주14시간형	100명 복지형(주15시간)	117명 복지형(주15시간)
전담인력 지원			1명	미지원	미지원
보조사업자수 (* 위탁기관수)			1개소	15개소	27개소
사업기간			9개월	8개월	9개월
예산 (광역3 : 기초7)			약 60,000천원 *도비 전액	834,523천원	996,000천원

[기초] 강원 춘천시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미시행		40명 복지형(주15시간)	40명 복지형(주15시간)	40명 복지형(주15시간)
전담인력 지원			4명 기관당 1명	4명 기관당 1명	4명 기관당 1명
보조사업자수 (* 위탁기관수)			4개소	4개소	4개소
사업기간			9개월	10개월	10개월
예산 (시비전액)			462,000천원	463,030천원	402,760천원

[기초] 충북 제천시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미시행		10명 복지형(주15시간)	10명 복지형(주15시간)	10명 복지형(주15시간)
전담인력 지원			1명	1명	1명
보조사업자수 (* 위탁기관수)			1개소	1개소	1개소
사업기간			6개월	12개월	12개월
예산 (시비전액)			55,000천원	97,685천원	100,363천원

<강원>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미시행			37명 복지형(주15시간)	41명 복지형
전담인력 지원				4명 참여자 10명당 1명	5명 참여자 10명당 1명
보조사업자수 (* 위탁기관수)				4개소	4개소
사업기간				9개월	12개월 *일부 지역 3년 위탁
예산 (광역5 : 기초5)				394,000천원	610,858천원

<인천>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미시행			71명 주14시간형	70명 주14시간형
전담인력 지원				10명 기관당 1명	7명 참여자 10명당 1명
보조사업자수 (* 위탁기관수)				10개소	11개소
사업기간				10개월	9개월
예산 (광역5 : 기초5)				408,874천원	520,386천원

[기초] 광주 서구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미시행			15명 주14시간형	20명 주14시간형
전담인력 지원				3명 참여자 5명당 1명	4명 참여자 5명당 1명
보조사업자수 (* 위탁기관수)				1개소	1개소
사업기간				8개월	8개월
예산 (구비 전액)				209,123천원	230,301천원

<부산>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미시행				32명 복지형(주16시간)
전담인력 지원					미지원
보조사업자수 (* 위탁기관수)					7개소
사업기간					10개월
예산 (광역5 : 기초5)					474,120천원

[기초] 경기 시흥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미시행				5명 복지형(주15시간)
전담인력 지원					1명
보조사업자수 (* 위탁기관수)					1개소
사업기간					8개월
예산 (시비 전액)					63,120천원

광주

연도지원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참여자 인원	미시행				12명 복지형(주15시간)
전담인력 지원					2명 참여자 5명당 1명
보조사업자수 (* 위탁기관수)					2개소
사업기간					5개월
예산					73,331천원

<첨부자료2>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역별 2023년 및 2024년 상황 요약

지역	내용
서울특별시	<p>'23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전담인력 25명(수행기관당 1명, 16:1), 사업기간 12개월, 서울특별시 예산 약 58억원(5,802,864천원) - '23년 중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탄압이 있어왔음.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적 공격이 이어졌고, '23년 7월 기준 직무변경으로 권익옹호 직무 삭제, 그리고 '24년 예산에서 사업폐지 확인됨. 서울시는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일자리에 제시하는 직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수행하지엔 큰 어려움이 있음. <p>'24년 :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중심대책위(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원직복직대책위) 조직하여 해고투쟁 및 기금모금 방식의 투쟁 예정.
경기도	<p>'23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500명, 전담인력 50명(10:1), 사업기간 10개월, 경기도 예산 약 62억원(6,251,726천원) <p>'24년 : 약 650명 확대, 사업기간 10개월 → 11개월 // 기존 수행기관 탈락 등 해고 상황</p>
전라남도	<p>'23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93명, 전담인력 15명(5:1), 사업기간 12개월, 전라남도 예산 약 15.3억(1,530,000천원), 광역/기초 매칭 - 비교 : 전남형 권리중심 조례제정 추진지역이나 발의가 지연되고 있음. <p>'24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120명, 전담인력 24명, 전담인력 5:1 매칭, 3년 수행 기관(일부 시군), 전라남도 예산 약 20.8억(2,088,936천원)</p>
전라북도	<p>'23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76명, 전담인력 미지원, 사업기간 12개월, 전라북도 예산 약 5.1억원(514,700천원), 광역/기초 매칭 <p>'24년 : 전담인력 신규 지원, 익산에선 3년 수행 기관 선정, 기타 물량 확대</p>
경상남도	<p>'23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00명, 전담인력 미지원, 사업기간 9개월, 경상남도 예산 약 8.3억(834,523천원) 광역/기초 매칭 <p>'24년 : 노동자 물량 100명 → 117명으로 다소 증가, 전담인력 미지원 및 9개월 사업</p>
강원도	<p>'23년 현황 (강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1명, 전담인력(8:1), 사업기간 10개월, 강원도 예산 약 3.9억원(393,500천원) - 비교 : 춘천시의 경우 기초지자체 사업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춘천시 안에 광역사업(강원도 지원), 기초사업(춘천시) 사업이 공존하고 있음. 강원협의회 춘천호반IL이 두 사업 모두 위탁사업자로 수행하고 있음. <p>'24년 : 원주는 3년 사업으로 진행, 노동자 물량은 전년과 동일.</p>

인천 광역시	<p>'23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50명, 전담인력 5명(8:1), 사업기간 10개월, 인천시 예산 약 4.1억원(408,874천원), 광역/기초 예산 매칭 - 비고 전권협 미조직 지역, 인천협의회 단위 공모참가 조직중 <p>'24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70명, 전담인력 7명(10:1), 사업기간 9개월, 예산 5.2억원, 매칭</p>
부산광역시	'24년 : 10개월 사업, 노동자 50명, 전담인력 미지원.
광주광역시	'24년 (광주광역시) : 5개월 사업, 노동자 12명, 전담인력 5명 당 1명 지원.
강원 춘천	<p>'23년 현황 (춘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명, 전담인력 4명(10:1), 사업기간 10개월, 춘천시 예산 약 4.6억원(463,030천원) <p>'24년 : 예산 4.6억 → 4억으로 약 6천만원 삭감되며 기간 9개월로 감소.</p>
충북 제천	<p>'23년 현황 (제천시 기초지자체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0명, 전담인력 1명(기관당 1명, 10:1) 사업기간 12개월(연중 6개월로 2회 나누어 집행하여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제천시 예산 약 0.9억원(97,685천원), 기초단독 지원(광역사업 없음) - 비고 : 전권협 미조직 지역(부모연대 제천지회), 기타 인건비 외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지역임. <p>'24년 : 전년 동일</p>
광주 서구	<p>'23년 현황(서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5명, 전담인력 3명(5:1), 사업기간 8개월,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 약 2억원(209,123천원), 기초단독사업(광주광역시 예산매칭 없음) <p>'24년 : 참여자 5명 중, 전담인력 1명 중.</p>
경기 시흥	'24년 : 노동자 5명 및 전담인력 1명, 6개월, 63,210원
세종시	'23년 12월 세종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정 토론회 진행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중

토론

—

서울지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례공유와 제언

박임당 교사 (노들장애인야학)

서울지역 권리중심 일자리 사례 공유와 제언

박 임 당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2020년 서울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일자리로,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인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장애인의 노동을 통해 수행하는 일자리인 것이다.

이 일자리는 장애인 권리옹호 직무, 장애인 인권교육 직무, 문화예술 직무 세가지로 구성 되어있다. 이 세 직무는 노들야학에서 그동안 학생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가운데 발굴한 일자리와 활동들이 표본이 되어 만들어졌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그 탄생에서부터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활동이 공적인 가치를 수행해내는 노동임을 인정하라는 투쟁의 결실이기도 한 것이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자가 되어 자신의 생산물을 내놓는 주체로서의 자리를 가질 수 있다. 탈시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역사회 연결망이라고 할 때, 이들이 노동자로서 연결망을 가지게 되면 더 적극적인 위치에서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더이상 서비스의 수혜자로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산물을 통해 지역사회와 만난다. 기자회견, 토론회, 행진을 비롯한 권리옹호 거리 캠페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업하여 준비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인권강의, 중증장애인의 문화예술 캠페인 등.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장애인 차별의 현실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삶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나는 문화예술의 장을 형성해 만남과 소통의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권리옹호, 인권교육, 문화예술. 이 세 직무를 통해 지금까지 장애인을 배제함으로써 장애인과 함께 살 준비를 하지 못한 지역사회와 중증장애인과 캠페인을 통해 만나고, 지역사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다.

노들장애인야학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략 4년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했다. 매해 사업 공모에 나오는 인원수가 달라졌기에 적게는 18명의 노동자부터 많게는 30명의 노동자까지 노들장애인야학에 고용되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로 4년여간 노동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직무가 진행되었을까. 가장 많은 인원이 고용되었을 때의 기준으로 일자리 시간표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월	화	목	금
탈탈탈	노들노래공장	춤 노들에스쁘와	자립생활 그리기 진Zine	움직임 일상 등장 워크숍 짜잔
피플빠스	타악팀 노들쿵쿵 차가차카	움직임 버티는몸	피플빠스 SNS 권익옹호	미술 구구절절 권리공방
권익옹호	권익옹호 주간회의	인권교육	권익옹호 현장활동	권익옹호 캠페인

* 탈탈탈팀 : 중증 발달장애인 노동자 / 대다수 탈시설 경험 / 문화예술 직무

* 피플빠스팀 :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발달장애인 노동자 / 탈시설 후 지역사회 거주 연한이 오래되었거나 재가 장애인인 노동자로 구성 / 문화예술 직무+권리옹호 직무 혼합

* 권익옹호팀 : 뇌병변 지체 장애인 노동자 / 탈시설과 재가 섞여있으나 탈시설 후 지역사회 거주 연한 오래된 노동자로 구성 / 권리옹호 + 인권강의 직무

권리옹호와 인권강의 직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노동자 조상지의 칼럼을 통해 대신 소개해 본다.

첫 번째 직무는 장애인 인식개선강사다. 나는 강서구에 있는 한울중학교에 처음으로 인권 강의를 나갔다.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 들어와 본 적이 없고, 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로 인사를 하자, 학생들은 크게 놀랐다. 15년간 장애인시설에 수용돼 있었고, 그곳에서 마실 물을 주지 않아, 너무 목이 말라서 욕실로 기어가 바닥에 있는 물을 훔아먹었고, 폭행당한 경험을 얘기했다. 학생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같이 화를 내주면서, 상처받지 말고 힘내라는 응원의 말을 쓴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학생들은 사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 당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관해 대화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배웠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처럼 인식 변화를 통해 사회를 바꿔나가는 중요한 일을 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 살아가지 않는 비장애 중심의 세상에서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이야기를 청해 듣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이뤄진 협업강사단이 비장애인이 주로 있는 일반 학교와 회사를 찾아가 장애인의 삶을 강사의 자리에서 이야기한다. 말하는 자리가 장애인에게 듣고 경험하는 자리가 비장애인 수강자들에게 주어진다. 배제된 장애인의 삶을 듣는 것, 말하는 권력의 자리가 잠시나마 바뀌는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남의 자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과 소통의 기회를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현장인권교육이 가지는 부수적이면서도 중요한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대체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강사들의 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 다수 있어서 이러한 경험 역시 교육으로 방문하는 기관의 접근성을 피드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이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교통약자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등에 대한 설치와 확대를 위한 일을 한다. 서울역 1호선과 4호선 환승구간에는 제법 긴 경사로가 있다. 물론 그 옆에는 계단도 있다. 비장애인들은 경사로와 계단 중 어느 곳을 이용할까? 놀랍게도 10명 중 9명은 경사로를 이용한다. 왜냐면 계단보다 경사로가 편하기 때문이다. 그 경사로에서 올라오는 비장애인들에게 둘러싸여 움직이지 못해 꼼짝없이 갇혔던 어느 날, 경사로 앞에서 30분 동안 관찰한 결과다.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 역시 휠체어 이용자들만이 아니라, 노인, 어린이, 유모차, 짐이 있는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은 지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이 편히 쓸 수 있는 것들의 보급을 위한 공공의 노동이다.&

-비마이너, &정부가 하지 않은 일, 중증장애인이 해왔다&, 조상지, 2023.11.29.

권리옹호 직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동을 한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UN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는 일들로 노동을 구성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민간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부 직무로는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캠페인, 차별사례 인권위 진정, 권리옹호 기자회견 참여, 장애인권에 관한 토론회·간담회 참여, 거주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공공기관 장애인 접근권 모니터링, 저상버스 인식개선 캠페인, SNS를 통한 장애인권 홍보, Disability Pride 행진 등이 진행됐다.

문화예술 직무는 노들장애인야학에서는 주로 발달장애인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일자리 시간표에도 잘 나와 있지만 노들장애인야학에서만도 무려 7개의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권리중심일자리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서울의 타 기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직무를 수행했는데, 미술, 노래, 춤, 문학, 연극, 악기연주, 공연, 전시 등이 있었다.

문화예술 직무의 생산물들은 연습과 축적의 과정을 거쳐 세상으로 나온다. 전시를 통해, 무대 공연을 통해, 글과 그림을 통해 시민들에게 말을 건넨다. 여기서 말을 건네지만 언어가 아닌 이유는, 노동자들이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노들야학의 발달장애인 노동자들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그림을 통해 소통하고자 할 때 훨씬 편안한 방식의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예술 무대와 작품을 통해 자신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표현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노동의 핵심이다. 탈시설 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의 중요성과 생생한 이야기를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표현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관(람)객과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중증장애인을 만나기 어려운 지역사회에 변화의 과제를 던져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탈시설의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을 만나는 방식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그리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노동의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서 살펴 보자. 중증발달장애인 노동자들로 구성된 탈탈탈팀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노들노래공장(이하 노노공)으로 출근하는 노래공장 노동자가 된다. 노노공에서는 뮤지션 만수(이민휘)와 함께 다 같이 모여 만들고 싶은 노래의 주제를 정하고, 집단적 작사/작곡 작업을 통해 매주 노래 한곡을 똑딱 만들어낸다. 정말 중증장애인들이 노래를 만들었느냐고? 그렇다. 뮤지션인 만수와 비장애인 매니저들은 지원업무를 수행했고 최대한으로 말해도 협업을 했을 뿐이다. 가사도 곡도 기본적으로는 중증장애인노동자들에게 나온 것이다.

-경향신문, 고병권, &노래를 만드는 공장& 2024.02.08.-

노래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랫말을 만드는 공정. 노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가사가 똑딱 나온다. 만수 자신도 믿기지 않는 듯 이렇게 덧붙인다. 정말 신기하죠, 똑딱! 다음 공정은 작곡이다. 노랫말이 완성되면 노동자들에게 곡을 주문한다. 이런 식이다. 임실님, 이것 노래로 불러줄래요? 임실이 곡을 붙여 노래하면 만수가 그것을 악보에 옮긴다. 모두 함께 노래한 뒤 녹음실 녹음까지 거치면 모든 공정이 끝난다.

-경향신문, 고병권, &노래를 만드는 공장& 2024.02.08.

노래만들기의 전반적인 과정을 구체적인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노들장애인야학 유튜브에 공개된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다큐멘터리인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를 보면 된다.

노들노래공장의 아이디어는 예술강사 만수로부터 나온 것이었는데, 우리의 노래 우리가 만든다는 기조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만든 모든 영상의 배경음악에 우리 노래를 사용한다거나, 거리 캠페인에서 틀어놓을 노래들을 모두 우리의 노래로 바꾼다거나 하는 큰 목표가 함께 제시되었다. 우리가 만든 노래는 장애인권에 동의하는 모든 곳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원과 악보를 공개 게시한다. 매주 만드는 노래들이 차곡차곡 쌓일때 즈음인 2022년 말부터 우리는 노들노래공장 홈페이지 (nonogong.kr)를 구축했고, 녹음한 음원과 만수가 정리한 악보를 상시 업데이트 하고 있다. 2024년 초에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만든 노래들을 모아 노래집도 발간했다.

많은 노래들 중에 소개하고 싶은 노래가 두곡 있는데, 가장 최근에 탈시설한 노동자 신 ~~선~~님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이다. ~~선~~님이 시설에서 계속 살던 때, 노노공에서는 ~~선~~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립하고 싶어요'란 노래를 함께 만들었다. 낮에 노동을 하는 ~~선~~님은 퇴근길 시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언제나 무거웠었다. 시설에서 나와 마음껏 지역 사회를 휘저으며 살고 싶었던 염원, 저녁시간 야학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너무 듣고 싶어 했던 염원을 모아 아래와 같은 노랫말이 탄생했다.

자립 하고 싶어요 밤에 수업도 듣고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 자고 싶어요
 티비 맘대로 보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소보로빵 먹을 거예요 나가고 싶어요
 자립주택 들어가자 자립주택 들어가자

2024년 드디어 기다리던 탈시설 자립생활을 시작한지 일주일 이 되었을 때, 노노공에서는 ~~선~~님 자립 초기의 기쁨이 그대로 담긴 노래 '나오니까 좋다'를 함께 만들었다.

시설에서 나온지 일주일 내 침대 내 방이 생겼네
 혼자 있으면 좋아요 괜찮아요
 먹는 거 마음대로 괜찮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텔레비 마음대로 괜찮아요
 친구야 자립하면 좋겠어
 나오니까 좋다 나오니까 좋다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노래로 직접 만들고,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알리는 것. 권리중심일자리에서의 문화예술직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노동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의 경우 권리중심일자리 이전부터 오랜기간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과 중증장애인의 노동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해온 것들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맞게 조정해오면서 직무를 구성해 왔다. 이러한 경험과 역사를 토대로 꾸려온 자원이 기관과 활동가들에게 어느정도 쌓여있는 것들이 있었다. 권리중심일자리노동자의 경우는, 일자리를 처음 가져보는 중증장애인에게 말 그대로 맞춤형의 노동과 직무가 고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인력과 근로지원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각자의 장애 상태에 맞는 적절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연습도 필요하다. 노동, 지원, 연습. 이 세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에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비로소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미 정해진 업무 틀에 노동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노동자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식과 조건으로 바뀌어나가는 지속적인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매일매일의 업무를 짜고 단발성으로 업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과 노동자의 특성에 맞게 업무 내용을 꾸려가면서도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어어나가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맞춤형의 태도와 관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평가해 다시 변화에 반영하고 또 다시 평가하고 살펴보고 다시 피드백하는 방식의 장기전이 필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이 심한 장애 혹은 어려운 행동 등으로 인해 이 일자리에서마저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를 필요로 한다.

노동자의 특성에 맞게 구조를 새롭게 짚던 사례로 노들야학에서는 일자리 첫 해(2020)에는 시간제/복지형 등 노동시간에 따라 두 팀으로 나뉘서 일자리를 수행했었다. 시간제 일자리는 권익옹호 직무 위주로, 복지형 일자리는 문화예술 직무 위주로 진행했다. 첫 해의 일자리 사업을 마치고 평가 과정에서 시간제 팀에 속해 있는 발달장애인 노동자와 비발달장애인 노동자 그룹이 섞여 있어, 권리 의제를 다루는 방식과 전반적인 일자리 진행에 있어 양쪽 그룹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간제 일자리 팀을 장애 유형에 따라 두 팀으로 다시 나누고, 뇌병변 지체 장애인 그룹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 그룹은 권익옹호에 더해 문화예술 업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성했다. 기존에 두 팀을 운영하기에도 벅차다고 생각했는데, 세 팀으로 나누자니 업무량에 아득해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노동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제로 업무 진행 시에 지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증장애인 맞춤형이라는 가치를 더 중시한 결정이었던 것 같다.

더 세부적인 사례로는 &노들 에스쁘와&라는 춤 프로젝트로 진행해온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단체로 추는 춤에서 쉽게 지향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같은 춤을 연습해서 합을 맞추는 것일테다. 에스쁘와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정해진 안무를 똑같이 추도록 하는 방식을 지양했다. 노동자 고유의 흥과 움직임을 따라 추면서, 예술 강사와 이를 지원하는 활동가 그룹이 소통과 변화를 시도해보는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다 대 다 지원 시스템이다. 예술 강사를 비롯해 야학 상근 교사와 비상근 강사 등이 다수의 노동자와 다 대 다로 만났을 때의 장점은 지원자 그룹이 노동자 그룹을 나눠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노동자의 변화나 컨디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체크가 가능해진다. 전체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관찰과 관점이 소통되는 것을 통해 노동자를 보다 입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맞춤형의 업무를 짜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당일의 컨디션에 따른 유연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자 그룹 간의 상호 활발한 소통이 꼭 필요하다. 업무 시간 내에 이뤄지는 지원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노동자가 퇴근한 이후에 지원자 그룹의 소통 회의를 매일 매일 운영했다. 이러한 시스템이 초기에는 매우 번거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더 수월하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노동 현장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상황들, 업무의 방향성에 대한 공동의 지원 원칙을 확인하고, 수정과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충분한 인원의 전담인력수가 필요하다. 중증장애인 10여명에서 최대 30여명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충분해야 한다. 사실상 업무 관련 소통을 위해서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근로지원인과의 소통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리고 업무 자체도 정형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유형과 정도, 선호 활동에 맞춘 개별 맞춤형의 직무를 고민해야하기 때문에 더더욱 밀착된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일례로 전남지역에서는 서울시에 뒤이어 권리중심일자리에 뛰어들었지만, 현재 노동자 5명당 1명의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첫 해에는 전담인력 인건비를 1원도 지원하지 않았고, 다음해부터 인원수에 상관없이, 12명일때나 30명일때나 모두 1명의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전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참고할 수 있는 콘텐츠의 축적이 필요하고, 기관 내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 2023년 서울에서 발간한 <장애예술인 맞춤형 문화예술 직무 매뉴얼>은 문화예술 직무에서 개별 직무의 틀을 구성하고 직무를 쪼개는 데에 참조점을 마련해 주었다.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매뉴얼이 있다면 그것을 매뉴얼대로 바로 수행하지는 못하겠지만, 직무를 세팅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맞춰나가는 시간을 단축하여, 더 빨리 맞춤형의 루틴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상의 매뉴얼과 루틴이 생겼을 때 좋은 점은 무엇보다 일자리 참여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자신의 노동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매뉴얼의 1-10 까지 처음부터 다 수행할 수는 없을테지만, 이 매뉴얼에 따른 노동자 업무 수행의 참여 정도를 체크하고 점점 더 참여의 면적을 넓혀가는 방식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매뉴얼의 현장 적용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매뉴얼이 점검되고 수정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각 기관의 업무 특성 별로, 개별 노동자와 지원자의 관계 속에서 각 기관별·개인별 맞춤형의 매뉴얼을 가지게 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중심일 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힘일 것이다. 서울시에서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 자리를 폐지하면서 내놓은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가 있다. 중증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들로 구성된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 자리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원예관리 보조, 택배 보조, 세탁물 정리원 등으로, 뇌병변 장애인은 품질검사보조, 콘텐츠 모니터링, 온라인 홍보마케터 등의 직무가 제안되었다. 특별한 맞춤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자리지만, 이는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일 자리의 직무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 일자리에는 중증장애인의 진입이 애초부터 어려웠기에 또 다시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화일 자리를 노들장애인야학은 진행하고 있지 않는데, 이 일자리가 권리중심일 자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의 노동을 시장으로의 연계하는 데에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다. 시장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두지 않았으면서, 특화 일자리를 통해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갖고 닦아 궁극적으로 시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한 설계인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 자리 폐지로 노동자를 해고시켰다는 기사에 대해서 보도자료로 장애인 일자리는 이 특화형 일자리를 통해 보전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라는 점에서 기존의 권리중심일 자리의 취지를 완전히 폐지시켰다..

이렇게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 펼쳐져 있다. 그렇기에 장애인권 운동의 현장에서 권리중심공공일 자리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켜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서의 공공 노동의 새로운 가능성,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를 지역사회에 당사자의 노동을 통해 뿌리내리는 일, 우리 사회가 좀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었던 권리중심공공일 자리의 가치들을 함께 인식하고 만들어내고 지켜내야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지면에서 새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는 단지 중증장애인들만의 일자리가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인간의 노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갈 기회가 사라진 사건이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험을 쌓아갈 실험실이 폐지된 사건이며, 서울시로서도 공공사업의 혁신성을 학습하고 홍보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사건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이 사라지면서 소중한 많은 것들이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비마이너, &노동이란 무엇인가&, 최태현, 2024.03.15.

토론

광주지역 중증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추진 현황 공유

오윤옥 경영기획실장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 광주사회서비스원 “같이(가치) 성장” 프로젝트 -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 사업 시범운영 현황

I 추진 배경

- 광주사회서비스원 2024년 운영방향 키워드 “같이(가치)성장”
 - 내부 임직원, 행정·공공·민간·학계·기업·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가치있는 아젠다 개발과 선정, 실행으로 함께 성장하는 문화 조성
- 단순 법적 의무가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관점에서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3.8%) 준수 노력
- 중앙정부·광주광역시 주요 장애인정책(일자리분야) 계획과의 연계성
 - 가. 새정부 장애인복지(일자리)분야 국정과제
 -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 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센터 확충
 - 나. (민선8기 공약) 장애인맞춤형 일자리사업 시행
 - 민간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형 공공 일자리 제공
 - * (고용) 63.5%〈비장애인〉 ↔ 42.7%〈중증장애인〉 ↔ 21.5%〈중증장애인〉로 1/3 수준 통계청 KOSIS통계(2023년 기준)
- 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 (비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 9대 정책분야 중 ④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확대
- 라. 제5기(2023~2026)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I-5-6 장애인일자리창출
 - 장애정도를 고려한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 노동권리 보장 필요
 - 권리중심·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기회 제공
- 마. 제2차(2023~2026)광주광역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1. 삶에 행복을 잇는 맞춤형 일자리 조성
 - 1-1. 장애인 일자리 창출 / 1-1-1. 광주광역시 장애인 취업지원
 - 1-1-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자체)
 - 1-1-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 바. 제2차(2022~2026)광주광역시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
 - 5. 경제활동보장 - 장애인 직업활동 지원 확대
- 사.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2017.7.1. 제4922호)
- 아.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지정(2023.4.10. 제6091호)

-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교통수단의 이용 편의성, 여가·사회활동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 자아실현 기반 구축, 의료서비스 접근성, 장애인 대한 차별인식 개선

II 현 황

1 장애인 및 장애인 일자리 [출처 : 202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23 광주복지 통계연감]

(2023.12월말 기준 / 단위: 명, %)

계	성별		장애의 정도		장애유형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남	여	심한	심하지 않은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노년층	
69,439	39,455 (56.8)	29,984 (43.2)	27,733 (39.9)	41,706 (60.1)		28,631	6,664	7,099	10,242	615	7,569	1,139	3,205
						2,711	131	279	405	61	419	269	

<전국 장애정도별 고용률 현황> (단위: %)				<비경제활동인구 일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연도	경증	중증	차이	사유	비율
2019년	40.1	20.9	19.7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64.9
2020년	41.7	19.9	21.8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	15.3
2021년	40.3	21.8	18.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10.8
2022년	39.9	21.8	18.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0.9 0.9
2023년	42.7	21.5	21.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0.8

2 보건복지부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구분	주요 직무	근무시간	급여수준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건강상태 및 질환 등을 사전 확인, 유의하여 전신안마 및 신체 부위별 안마서비스를 등을 제공 (자격)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한 시각장애인	- 주 25시간 (1~11월) - 주 23.5(12월)	- (1월~11월) 1,291,660원 - (12월) 1,212,78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 (자격) 19세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 광주광역시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현황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70명, 1,304백만원	66명, 1,203백만원	93명, 1,736백만원	80명, 1,460백만원

③ 장애인 권리 및 욕구분석

○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_ 복지서비스 수요

-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 2020년에 비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감소한 반면, 고용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 교육 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권리 및 욕구분석(2023. 광주사회서비스원) 일부 발췌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장애인삶 패널조사」 제1차(2018) 및 제2차(2019) 조사자료 활용

[장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장애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79.4%를 차지하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72.9%를 차지함
- 조사대상자의 68.2%는 장애로 인해 주 5일 중 1일은 쉬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로 인해 일하는데 지속적인 보조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이 61.3%를 차지함
- (인구사회학적 요인)
 - 여성이 남성보다, 장년기와 노년기가 청중년기보다,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 장애인이 배우자 있는 장애인보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거주주택 비소유자가 소유자보다 고용(취업)에 있어서 장애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됨
- (장애관련 요인)
 - 장애유형별 고용에 대한 영향은, 뇌병변 장애가 지체장애보다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반면, 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는 지체장애보다 고용에 대한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됨
 - 장애정도별 영향은,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장애로 인한 고용에 영향이 더 큼

Ⅲ 추진 근거

- (법률)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제1항 제9호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 (조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3조(서비스원의 사업) 제1항 제9호
- (민선8기 공약) 장애인맞춤형 일자리사업 시행
 - 민간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형 공공 일자리 제공

Ⅳ 그 간 추진 상황

- 2024.2.19. 광주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 간담회(7개 복지관 참여)
 - 사업취지 설명 및 현장 의견수렴 등 진행
- 2024.3.6. 광주장애인복지관협회 기관장 간담회
 - 광주사회서비스원 협업사업 관련 참여여부 등 논의
- 2024.3.29. 제1차 실무자 간담회(7개 복지관 참여)
 - 복지관별 참여가능 일자리 직무유형 공유 및 협력방안, 예산 등 논의
- 2024.4.4. 제2차 실무자 간담회(4개 복지관 동구, 남구, 광산구, 엠하우스)
 -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 정의 및 직무유형(문화예술, 권익옹호)
 - 직무활동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생산물을 목표로
 - 참여자 관리 및 운영비 집행의 기관별 역할
 - (사서원) 발대식, 참여자 교육(기본소양, 의무교육), 간담회, 모니터링, 성과회
 - (참여기관) 근태관리, 사업수행사항 점검, 직무지도 및 상담 등
 - 필요경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지출(필요 경비 요청)
- 2024.5.4. 제3차 실무자 간담회(4개 복지관 참여)
 - 사업명 확정 :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 시범사업
 - 활동일지, 활동 창조물에 대한 논의
- 2024.5.8. (업무협약)광주장애인복지관협회,
2024년 사업참여 장애인복지관(동구, 남구, 광산구, 엠하우스)
- 2024.6.10. 임용식 및 발대식

V 추진 방향

우리는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 를 이렇게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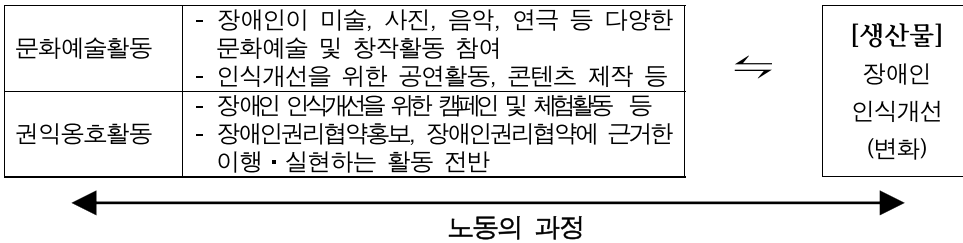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노동의 기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그들의 능력과 기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4년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장애인복지관협회가 함께하는 중증장애인 특화 일자리는 문화예술, 권익옹호란 직무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변화)' 라는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노동의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는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직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직무는 중증장애인의 '신체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특정 필요와 능력에 맞춰 설계되며, 특화일 자리를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활동을 '장애인 인식변화'라는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노동의 과정으로 인정

[직무유형]



-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와 연계하여 좋은 일자리 모델 선도 및 전파
- 광주장애인복지관협회의 협업사업(업무협약)으로 참여자 추천, 일자리 개발 및 현장 적용
 - 소속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이며, 민간현장(복지관)으로 근무지 지정
 - 직무개발 및 참여자 관리 : 협업사업 참여 복지관
-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차년도 일자리사업에 재투자

VI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6. ~ 12.(7개월)
- 사업대상: 광주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소득재산 기준없음)

(참여제한) *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참조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획가입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는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및 제35조2(중사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2에 따른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형법상범죄,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범죄 등)

- 참여자 인원 : 10명(특화일자리 9명(중중), 전담인력 1명(경중))
- 2024년 협업참여기관
 - 동구장애인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
- 직무내용
 -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9명) : 문화예술활동, 권리옹호활동

구분(근무지)	참여자 (9명)	주요직무	근로시간
동구장애인복지관[문화예술]	A	합창단, 뮤지컬	주5일(3H)
	B	서예, 문인화	주5일(3H)
남구장애인복지관[문화예술]	C	합창단	주3회(5H)
	D	합창단, 회화, 장애인기능대회 참여	주3회(5H)
	E	문예, 회화, 장애인기능대회 참여	주3회(5H)
	F	합창단	주3회(5H)
광산구장애인복지관[문화예술]	G	연극 (자료조사, 대본연습 및 신체훈련 등)	주5일(3H)
엠마우스복지관 [문화예술&권익옹호]	H	미술 도예(매인들기 작업 등)	주5일(3H)
	I	인식개선 (장애이해 원고작성, 자원순환활동, 포스터제작)	주5일(3H)

- 전담인력(1명)

구분(근무지)	주요직무
광주사회서비스원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운영 지원 업무 (발대식, 교육(기본), 간담회, 운영비 지출, 성과보고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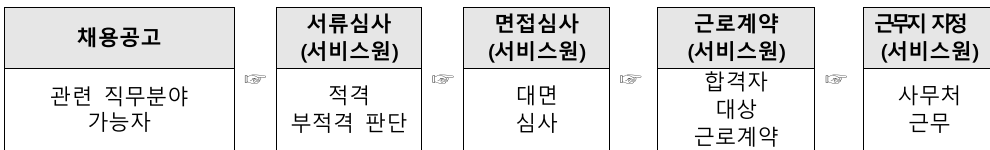
- 근로시간 : 일 3시간, 주 5일
 - * 직무활동에 따라 주15시간 범위 내 일일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
- 사업예산 : 79,800천원(광주사회서비스원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 활용)
 - (참여자 인건비) 69,400천원
 - (운영비) 10,400천원(행사운영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 *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지출(참여기관 행정업무 경감)

VII 채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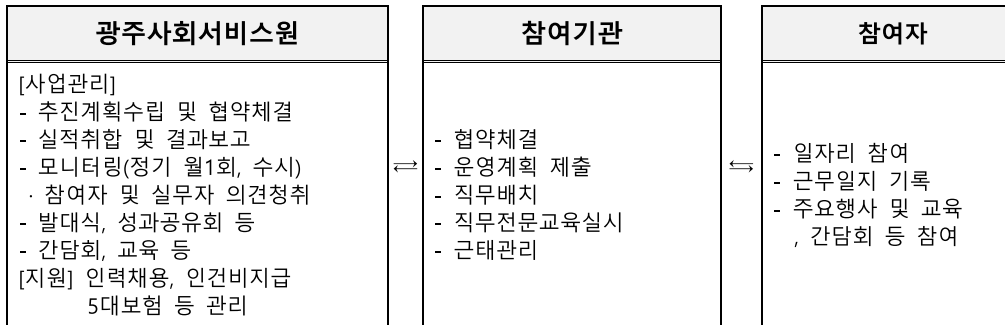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일자리 참여자



2 전담인력



VIII 기관별 역할



IX 개선과제

- 올해 광주사회서비스원과 4개 장애인복지관(동구장애인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이 ‘같이성장’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 사업은 참여자들의 직무활동을 노동의 과정으로 만드는 시범년도이며 향후 일자리 확산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모색해 가는 과정임
- 우리나라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시행, 운영되고 있는 정책은 근로능력이 높은

장애인을 기대하기 때문에 비교적 경증의 장애인부터 고용하며, 이에 따라 경제적 생산기준에서 최중증장애인은 배제될 수 밖에 없음

-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국제적으로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최형인(2023)은 ‘서울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일 자리를 참여 후 참여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고,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권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기술하였음. 노동은 인간의 삶에서 단순 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사회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다수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음.
- 권리중심 공공일 자리는 민간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된 중증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형 공공 일자리 제공임으로 장애인의 신체기능이 아닌 특징과 능력에 기반하여 장애인의 권리 생산을 위한 노동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권리중심 공공일 자리의 노동의 과정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권리를 제고하는 일자리임으로 내부 활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부(지역사회, 시민 등)와의 연결고리, 일자리의 창조물을 어떤 활동(공연, 전시회 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함
- 시혜적인 일자리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연속성, 적정 급여, 일하기 적합한 근무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일자리 참여자 선발에 있어 직무활동에 기반한 선발 기준이 필요함. 지원자의 보유 재능, 잠재된 능력이 직무활동과 연관이 있는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은 있는지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 더불어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직무교육의 지원도 중요함
-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관계, 교류 속에서 참여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그룹형 일자리(연극단, 영상제작단, 인식개선단 등)
모색도 필요함

- 이에 오늘 토론회가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삶의 행복을 잇는 노동 권리로 자리 잡기를 바래봄

토론

—

광주광역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추진계획과 고민

김상숙 장애인정책팀장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2024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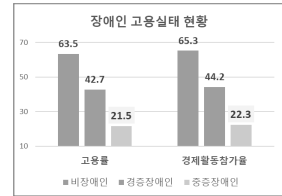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2024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계획<안>

I 추진배경

- (사회참여 기회)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경제적 보상 보다 사회참여를 통한 노동 권리와 기회 보장으로 통합사회 구축
 - *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을 통한 소득(income to work)'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복지(welfare to work)'의 실현
- (민선8기 공약)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존감과 동기를 고취하여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 * (고용률) <비장애인> 63.5% ↔ <경증장애인> 42.7% ↔ <중증장애인> 21.5%로 비장애인 대비 1/3 수준
 - ** 광주지역 장애인 69,314명 중 심한장애인은 27,733명(4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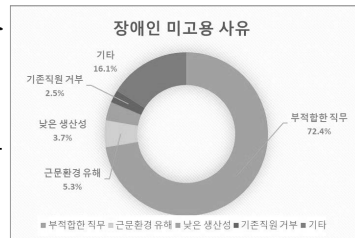


II 현실태 및 문제점

- (직업재활시설 한계)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33개소, 903명) 이용 중증장애인은 제조업 중심의 단순작업 참여
 - *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로 훈련장애인으로 선정하여 월 5-10만원 수당만 지급하지만, 보호자들은 가족돌봄 한계, 대체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 선호
-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할 경우 종사자 인건비 등 재정부담 가중

시설 및 이용자	계(A+B)	인건비(A)	운영비(B)	비고
33개소 903명 (종사자 244명)	151억원	131억원	20억원	장애인 1인당 17백만원 지원 수준

- (고용시장 악화) 기업은 부적합한 직무, 근무 환경 유해, 낮은 생산성 등으로 채용 기피
 - * "2021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결과" 미고용 사유로
 - ①부적합한 직무 72.4%, ②근무환경 유해 5.3%, ③낮은 생산성 3.7%, ④기존 직원 거부 2.5% 순



III 비전 및 추진방향

중증장애인의 내일을 풍요롭게, 자존감을 탄탄하게

(구조적 한계)

(중점가치 전환)

추진방향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① 제조업 중심의 직무 한계 * 일반기업과 경쟁력 및 수익개선 한계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② 낮은 재투자 및 성과 * 고용장려금 시설운영비 활용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③ 직업재활시설 재정 부담 * 기존 직업재활시설 활용시 1인당 17백만원 예산 소요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① 제조업 → 문화·예술 등 다양화 ② 생산성 → 자존감 및 동기 부여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③ 고용장려금(35만원/인) 재투자로 만족도 및 사업효과 제고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④ 수행기관 공모로 재정부담 완화 및 책임성 강화 </div>
------	---	--

- (협업 강화) 장애인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연 협의체를 통한 권리중심 일자리의 중점가치 및 추진방향 설정
- (단계별 확대) 기존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인력 단계별 확대
 * 임금격차로 인해 기존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이용자에 대한 빨대효과 최소화
- (기금 우선활용) 市 재정형편을 감안 장애인복지기금 예산 우선 활용
 *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기금 우선 활용하고 향후 본예산 반영 계획

IV 세부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8. ~ 12월 (5개월)
- (사업비) 73,332천원 (장애인복지기금 활용, 운영비 포함)
 * 그간 장애인복지기금(연 1억원)은 장애인단체 지원사업(8개 내외)으로 활용
- (참여자격) 만 18세 이상 미취업 최종중장애인
- (참여인원) 12명 (보조인력 2명 별도)
 * 민선8기 시장공약 목표는 25명('24년) → 50명('25년) → 50명('26년) 이지만, 재정여건을 감안 '26년도 달성목표 추진(10명(24년) → 25명(25년) → 50명(26년))
- (인건비) 참여자 78만원(주15시간), 보조인력 266만원(주40시간)
- (직무유형)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 등

구분	① 권익옹호활동	② 문화예술활동	③ 인식개선 활동
주요직무(안)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 등 각종 모니터링	·미술음악댄싱연극 예술단 운영지원 등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강의 공연

2 근로조건 및 추진방식

1 근로조건

- (근로기간) '24. 8월 ~ 12월(5개월간, 단, 25년도 예산확보시 1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참여자(주 15시간, 월 79시간) / 보조인력(주 40시간, 월 209시간)
- (보 수) 최저임금^{참여자}(9,860원), 생활임금^{보조인력}(12,760원) 주휴수당, 퇴직금 등 적용 임금 산정
- (수급자격) 국민기초 수급자격 유지 조건 70만원/월 (수급비 10~20만원 삭감)

구 분	산출근거
참 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 79시간 • 월 급 여 : 9,860원(24년 최저임금) × 79시간 = 778,940원 • 운 영 비 : 85,680원 (인건비의 11%) • 퇴 직 금 : 없음(단, 기간연장시 25년도 지급)
보 조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209시간 • 월 급 여 : 12,760원(24년 생활임금) × 209시간 = 2,666,840원 • 운 영 비 : 293,350원 (인건비의 11%) • 퇴 직 금 : 없음(단, 기간연장시 25년도 지급) ▶ 지원기준 : 일자리 참여 수요가 최소 5명 이상인 수행기관

- (참여자격) 최종증장애인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 거주자)
 - (참 여 자) 만 18세 이상 미취업 최종증장애인
 - (보조인력) 수행기관에서 선정하되 공정채용절차(공고) 준수

최종증장애인이란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없는 중증장애인
- * 뇌병변장애인, 척수장애인, 근육장애인,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 언어, 청각 및 시각 등 중복장애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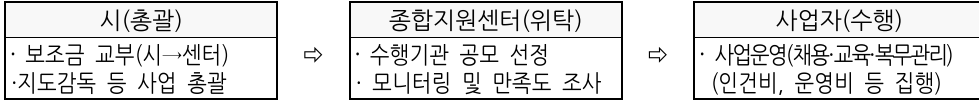
- (직무유형)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

구 분	직무 내용
권익옹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공공장소 퍼포먼스*, 장애인 편의 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장애인 차별사항 개선 요구 활동 등
문화예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에 참여.수행 하는 창작활동 *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 소망 등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 등
인식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강의.공연 활동 등 * 장애인이 교육기관 등에 방문하여 강사 및 연주 등 시연

② 수행기관 선정

○ (추진방식) ①장애인종합지원센터 위탁* → ②수행기관 공모 선정

* (예산과목 변경) <기존> 사회복지사업보조 → <변경> **공기관위탁사업비**



○ (수행기관 자격)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기관 및 단체

* 수행기관은 최소 5명 이상 참여 수요자 확보 후 사업수행 가능

○ (참여조건) 고용장려금(보수의 60%, 약35만원)을 사업비로 전액 재투자

○ (선정 평가) 전문평가위원회(5명) 구성 후 4개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선정(단, 70점 미만시 재공고)

* 수행기관 평가 항목(최고 및 최저 점수 제외한 평균)

합계	①목표 정합성	②수행 능력	③실현 가능성	④사업 효과성
100점	30점	20점	30점	20점

③ 기관별 역할

<광주시, 종합지원센터>

- (사전교육) 수행기관 회계담당자 대상 보조금 집행 회계교육 실시
- (모니터링) 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분기별 수행기관 고용장려금 수입 및 지출 실적 등 확인
- (만족도 조사) 수행기관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수행기관>

- (참여자 선발) 일자리 참여자·보조인력 선발 및 직무배치
 - 참여자·보조인력 공개모집 및 지원서 접수, 심사, 선발, 근로계약 체결, 직무배치 등
- (복무관리) 참여자·보조인력 복무관리(출근, 연병가, 참여중단 등)
- (실적보고) 보조금 집행, 정산 및 일자리 추진실적 보고 등
 -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등, 일자리 참여자 직무 기본교육 등 실시

V 향후계획

-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위탁(市→센터) : 2024. 6.
- 수행기관 공모 및 사업 추진(센터) : 2024. 7.~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광주에서 **'잘'**하자!

